

정권교체後 첫 정기국회… 與野 民生·경제 입법 신경전 예고

사회부총리·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삼특검 연장법안 처리 등 갈등 전망
與, 오는 25일 검찰개혁 처리 예정
올해 224건 법안 중점 추진 계획도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국가 성장의 동력의 살리는 여야의 경쟁이 기대된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통해 본격적인 정기국회 포문을 열고 내달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정권교체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고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리는 데 이어,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연장하는 특검 연장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 연장법안을 강행하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랴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윤(진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관심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법이 아닌 국회의원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월25일에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7대 분야의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AI 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업(CDMO) 규제지원 법적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분야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배임죄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 적정화로 기업과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심융합특구 기업이전 세제지원법)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우원식, 中 전승절 참석… 南北관계 전환계기 될까

오는 3일 베이징서 전승절 80주년 행사
김정은 총비서 조우 가능성에 대비
동선 예측불허로 만남 여부 불투명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남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만일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는 9월2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이튿날인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불참하고 우 의장이 사절단을 구성해 참석하게 됐다. 사절단에는 국회 한 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동행한다. 국민의힘 측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으나, 김정은 총비서의 방중 소식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비서도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나흘간이나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김 총비서 입장에서 6년8개월여만에 중국을 찾는 것이며, 첫 다자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면, 2018년 이후 두 번째 조우다. 우 의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김 총비서와 잠시 대화를 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대신 입법부 수장으로서 우 의장이 중국에 방문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김 총비서에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진 않았다. 그러나 우 의장과 김 총비서의 조우를 통해 APEC 초청, 북미 정상회담 등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도 혹시나 모를 두 사람

의 조우에 대비해, 우 의장 측에 도움을 주는 등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총비서)이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회의장께 필요한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전승절 당일 우 의장과 김 총비서가 만나게 된다면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열병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천안문 망루다. 10년 전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망루에 오른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김 총비서와 푸틴 대

통령 외에 르엉 끄엥 베트남 국가주석,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이에 초청된 정상들은 시 주석과 함께 망루제 일 앞줄에서 열병식을 관람한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망루에 오르더라도 김 총비서와 가까이 서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우 의장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박지원 의원은 “김 위원장(총비서)의 동선이 예측불허로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회는 행사 직후 시 주석이 주재하는 리셉션이다. 리셉션은 행사에 비해 비교적 동선이 자유롭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혹시 리셉션 같은 데서 잠깐 수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도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 李 대통령에 ‘단독 회동’ 요청… 주도권 선점 시도

李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공식 제안
장동혁, 조건 내걸수록 여론전 불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회동 제안에 대해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건 데 대해, 정치권에선 주도권 선점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 복원’이 필요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조건을 내걸수록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전

망도 있다.

3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해당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히자 “단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8일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을 마친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 제안했지만, 장 대표의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1야당 대표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 회동 자리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이며, 이 자리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강경 대여(對與)투쟁을 기조로 내세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성과를 ‘듣기만’ 하고 올 경우 당내 극우 지지층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 대표의 단독 회동 제안은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가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사용되던 ‘영수회담’이

라는 용어를 꺼내는 것 역시 이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야의 초강경파 대표가 서로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 이 대통령이 회동을 성사시킨다면, ‘정치 복원’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장 대표가 단독 회담이나 의제 논의 등 조건을 내걸었는데, 조건이 늘어날수록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이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음에도, 야당 대표가 피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